

교육부 예산 늑장에 방과후 '돌봄교실' 차질

광주 초등생 3069명→7892명으로 증가

준비 제대로 안돼 3월 새학기 과행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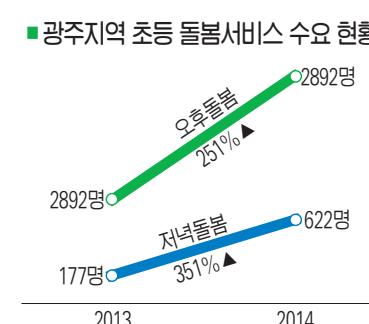
광주 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평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이용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시설 확충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3월 개학과 동시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조사를 한 결과, 146개교에서 7892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069명보다 257% 급증한 인원이다. 교육부가 올해 1~2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오후 5시까지(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는 밤 10시까지) 무상으로 돌봄주기로 발표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1~6학년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운영했던 전용돌봄교실 155개실에서 144개실(교실겸용 110개, 비품만 설치 34개)을 추가해 총 299개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한 144개실 중 110개실은 일반교실의 뒷편 일부를 온돌방으로 개조하고, 나머지 34개실은 일반교실에 비품만 설치해

돌봄교실로 사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지 않아 시설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함께 쓰는 겸용교실의 경우 한 달 가량 소요돼 3월 개학과 동시에 전면적인 돌봄교실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규 수업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도 교실이 부족해 평나물교실 수업을 한다고 비판하는데 여기에 돌봄교실로까지 활용하라니 답답하다”며 “수업이 일찍 끝나는 1~2학년 교실을 돌봄교실로 써야 할 상황인데, 그러면 해당 교사의 수업 준비공간이

없어져 정규 교과의 수업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은 꼭 필요한 3~6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의 탈락도 예상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돌봄교실을 1~3개 실 확대하는데 희망자가 넘치면 1~2학년 학생을 우선 받고, 3~6학년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돌봄전담사 운영도 문제다.

돌봄교실은 확대되면서 돌봄전 담사도 늘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무기계약직이던 돌봄전담사를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업무이지만 근로조건이 달라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기름유출 방제 현장 보내기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6일 광주시 북구 응봉동 청사 민원인 주차장에서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피해지역을 돋기 위한 현장 등 방제물자를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북구는 7일까지 10여t의 현장 등을 모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아 여수에 보낼 예정이다.

‘청소년 훈계’ 폭력, 정당방위 인정 처벌 안한다

경찰, 불합리한 수사 관행 개선

이모(34)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A 아파트 놀이터에서 청소년인 듯한 학생 3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나무 라다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는 “형, 삼촌 입장에서 꾸짖었는데 ‘무슨 참견이냐’며 큰소리를 치며 대드는 학생에게 화가 치밀었다고 했다.

경찰이 일탈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나누라거나 훈계하다가 폭행을 휘두른 ‘어른’을 정당 행위로 인정,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당 방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양측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상방 폭력’으로 처벌해왔다.

다만 경찰은 정당 행위 식별을 위한 8가지 기준이 담긴 ‘정당방위 심별 검토서’를 적극 활용해 입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정당 방위로 인정되면 쌍방 폭행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쌍방 폭행 수사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폭력·위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훈계 목적 등 뚜렷한 정

상이 있을 경우 ▲불법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제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될 때 ‘불법’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정당 행위 식별을 위한 8가지 기준이 담긴 ‘정당방위 심별 검토서’를 적극 활용해 입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상방 폭력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遺志)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연합뉴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언이나 결과 발표를 시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수사 은폐’ 김용판 前청장 무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규모는 하니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총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이다.

협력업체들이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면서 발생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했는데 이를 현금화하려고 SPC를 만들었다. SPC는 받은 매출채권을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 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매출채권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SINCE 1988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픽전격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1M준이가

59만원

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 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식(D) 대산프리모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1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